

한국사회의 변화와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모색

이 덕 규*

- I. 서 론
- II. 정치교육의 성격과 목적
- III. 한국사회의 변화와 정치교육의 방향
- IV. 결 론

I. 서 론

한국의 정치교육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여왔다.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를 가리켜 민주시민성(citizenship)이라고 하며 이를 함양하는 활동을 정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교육은 일반 국민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지도층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정치사회적인 지도층의 민주시민성은 민주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민주시민성은 그러한 정치사회적 지도층을 선출하거나 민주적 제도를 마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그 제도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되므로 청소년에 대한 정치교육은 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어떠한 실천원리가 중시되는가를 알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그러한 실천원리가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교육에 관한 논의는 흔히 ‘정치사회발전을 위한 정치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는 기존의 한국정치가 분단체제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강사

하에서 혼란과 위기를 반복하면서 권위주의체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사회영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이었던 국가의 주도아래 사회경제적 가치의 생산을 극대화 할 것을 강조하여왔던 한국적 정치상황과도 관련이 있다(이종열, 1992 : 293).

이처럼 한국의 정치가 산업화, 분단상황, 권위주의 정치문화등의 조건들에 의해 틀지어지게 됨으로써(김영명, 1987 : 377~405) 강력한 국가주도에 의한 산업화의 추진과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치교육에서는 체제유지적이고 순응적인 국민교육이 강조되게 되었던 것이다(이종열, 1992 : 294).

현재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특히 1960년대 이래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급격한 변화를 겪어오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권위주의정치의 극복과 한국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체제유지적이고 순응적인 정치교육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정치교육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정치교육은 어떠한 현실인식하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이 글은 한국 사회의 변혁의 과정에서 과연 우리의 청소년 정치교육이 지니는 지향점이 무엇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지니는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정치교육의 성격과 목표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와 함께 한국사회가 어떠한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가에

대하여 논한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치교육의 과제를 정치사회의 변혁이라는 관점에서 취급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의 정치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II. 정치교육의 성격과 목적

1. 정치교육의 성격

정치교육의 성격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교육은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치하고 있다. 일찌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인간은 태어날때 부터 정치적 동물이다’고 논하고 있다. 그는 인간이 정치체를 형성하여 질서를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다양한 욕구를 지닌 인간들이 사회생활을 순조롭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질서를 수립하고 이것을 유지하여야 가능하다.

이처럼 인간은 사회공동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정치이고 이러한 정치에 적응해 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교육이다. 정치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정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정치교육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치교육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여러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1) 정치질서 또는 정치체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지지를 형성하는 것(T. Tapper, 1976 : 1~3).

2) 정치에 관한 연구와 정치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획득하는 것(W. Langeveld, 1982 : 11).

3) 정치질서 유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의 정치생활 방식을 형성하는 규범적 활동(이종열, 1989).

4) 사회공동체 내에서 살도록 규정되어진 인간이 공동체 내에서 질서있고 조화된 삶을 가능케 함에 필요한 정치적 지식을 전수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학습과정(사회교육연구회 1983 : 162).

5) 한 국가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소속된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체제나 행위규범 및 행동유형을 내면화 시켜 정치능력을 갖도록 하는 교육(유형진·강환국, 1982 : 31~32)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치교육은 그 사회성원들이 선호한 사회적 정치질서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며 그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적 과정이나 제도, 계획 등을 제공하는 하나의 가치체제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은 규범적이고 경험적인 인성과 인간의 조건을 설명하고 판단하며 또한 선호한 정치질서의 존속과 발전에 관한 일련의 기본적인 전제를 교육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과거에 대한 해석과 현재에 대한 설명,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게 된다. 이같은 입장에서 보면 정치교육은 일반적으로 국가체제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근원적 수단으로서의 교육의 기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경웅, 1982 : 189).

2. 정치교육의 목적

정치교육의 성격에서 정치교육의 목적이 부분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정치교육의 목적은 정치교육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 시키고 특수화 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치교육은 어느 사회에서나 시행되고 있지만 그 목적은 사회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민주적 교육의 원리에 의해서 정치교육이 시행되어 진다. 이에 반하여 전체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는 교육이라기 보다는 정치사회화 또는 정치적 세뇌의 성격을 띠고 있다(우영호, 1994 : 70).

인류사회에 존재했던 대표적인 정치적 세뇌의 예는 공산주의체제의 소련과 나치통치하의 독일, 파시즘의 이태리, 군국주의의 일본에서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공산주의 국가는 물론 일부 권위주의 사회의 학교교육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세뇌를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력의 배양과는 상이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적 가치는 물론 민주적인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치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이 실패하게 되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준법정신의 결여로 인하여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정치적 무관심이 만연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은 부패한 정치인들이 재선되도록 하여 이로 인해 정치문화는 더욱 황폐해지는 부작용을 초래 한다.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와 생활화를 통하여 정치공동체

의 존속과 안정 및 발전을 위한 것이지 특정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정치교육의 일차적 과제는 정치질서의 유지에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국민들로 하여금 기존의 사회적 규범에 동조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우영호, 1994 : 70) 따라서 정치교육을 단순히 특정정권이나 권위주의 체제의 통치논리를 제공하는 정치적 세뇌 또는 선전활동으로 비하시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정치교육의 목적은 특정정권의 정통성 유지와 선전활동을 위한 정치구호를 흥내내는 것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성적, 자율적, 비판적 정신을 가진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정치교육의 목적은 특정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목적으로 설정해야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정치교육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교육의 목적과 내용들이 교육적 정당화나 검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계층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권위주의 사회나 전체주의 사회인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교육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천되는 것이다.

정치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원리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의 지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상관관계가 있는

정치적 지식도 또한 획득되어질 것이다. 원리들과 지식과 병행해서 똑같이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 사이에 박애적 태도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정치교육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원리와 절차를 존중하고 민주적 가치들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박애적인 태도가 길러지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원리와 가치들을 이해하는 민주시민이 필요하다. 민주시민은 누구나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식, 태도, 가치등에 대한 정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청소년들이 정치교육을 받지 못하면 정치적 문맹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정치적 문맹의 상태가 지속되면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양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존속 자체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III.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정치교육의 방향

1. 한국 사회의 변화 전망

1) 민주화의 진전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바로 '민주화'¹⁾ democratization의 진전이다. 특히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갑자기 증폭되어 왔고 앞으로

1) 민주화란 ①그 사회가 다원적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고, ②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된 통치이데올로기는 존재하지 않고 이념적 다원화 현상을 나타내며, ③국가나 정치조직에 의한 대중동원은 없고, ④통치권의 행사는 형식적으로 엄격히 규정된 범위 안에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말한다. 민주화란 바로 이러한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도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화는 반민주주의체제로부터 민주주의체제로의 정치적 변화과정으로서 반민주주의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다. 반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바로 최고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아무런 견제없이 자의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독재체제라 할 수 있다²⁾.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한 지배라면, 독재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본질로 한다. 또한 민주주의가 정치적 경쟁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면 독재는 강제적 동원과 억압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재는 반민주주의 또는 비민주주의와 동일시 된다.

한국에서 반민주주의체제는 권위주의체제로 특징된다. 이러한 권위주의체제에서는 정치과정에서 경쟁의 원리가 무시되고 지배권력이 책임성과 대응성을 갖지 않는다. 둘째 권위주의체제는 정당이나 의회등의 동의기제가 퇴화하고 반면에 억압기제가 발달한다. 셋째, 권위주의체제에서 국가관료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통치체제의 지배도구로 기능하는 종속성을 띠게 된다. 넷째, 권위주의체제는 사상과 이념의 일원화를 추구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견을 용납하지 않으며 체제와 반체제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따라서 권위주의체제는 민중들의 정치참여를 배제할 뿐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비민주적 정치체제에서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전위현상을 민주화라고 한다면 한국에서의 민주화는 통치에 있어서의 과거의 권위주의적 유산과 관행을 청산하면서 시민권의 규범과 원칙을

점진적으로 통치영역에 확대, 실현, 공고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경쟁*contestation*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조건 아래서 공정하게 실현되고 또한 시민의 참여*participation*가 확대되고 따라서 정치권력의 책임성*responsiveness*이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민주발전이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여러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동안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볼때 민주화의 진전이란 대략 인간해방과 자유에 대한 요구, 자율과 참여에 대한 요구, 권위주의의 배경과 획일화의 거부등에 관한 추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발전의 추세에 따라 나타나는 이러한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수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한국사회가 이들 요구들을 수용할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음으로서 나타날 부작용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즉 개인의 기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함으로써 국가사회적 이익 또는 공익을 저해할 우려, 자유 이념과 평등 이념간의 갈등, 이미 사회전체에 만연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의 경향, 그리고 이에 따라 분출되고 있는 집단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 등이 그 단적인 예로서 이러한 현상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현상이 가정, 학교, 직장 등 여

2) 독재의 의미를 "권력의 집중"으로 규정할 때 그것은 종종 전제*Autocracy*나 폭정*Tyranny*이라는 용어들과 혼동된다. 그러나 독재와 전제 및 폭정은 개념상 구분된다. 전제 전제와 폭군제는 독재와 달리 법과 제도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제란 지도자 개인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함축한다. 반면에 독재는 넓게보면 전제를 포함하지만 반드시 일인의 절대권력 행사로만 특정화 되지 않는다. 한편 폭군제는 전제와는 달리 세습제와 같은 정통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차경수, 1991: 2).

따라서 이같은 문제들이 술기롭게 극복되지 아니하고서는 민주사회의 정착이라는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합리적인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회주의의 정착,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 이념적·사상적 혼란과 개인간 또는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전전한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은 이제는 주요한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바 이에 정치교육에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2) 지방화의 진전

주지하다시피 1961년 이래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에 다시 재개되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한편으로는 수년동안 전개되어 온 민주화 추세와 한 결과일 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인구, 정치, 경제, 문화의 과도한 집중 및 이로인한 불균형적 지역발전이라는 문제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측면에 걸친 지방화로의 이행이 전망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정치권력의 수평적 분산인 삼권분립에 못지 않게 정치권력의 수직적 분산인 지방분권을 통해서 권력의 불법과 남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원래 권력이란 그 속성 자체가 남용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것이다. 특히 권력이 집중될 경우 집중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해되는 세력을 배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권력은 더욱 더 쉽게 남용되고 부패하기 쉽다. 따라서 정치발전이란 이 처럼 위험한 권력을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정착된 단계를 말한다. 그러나 권력을 꼭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구현시킨 것이 권력의 수평적 분립인 삼권분립이요 동시에 권력의 수직적 분립인 지방자치인 것이다.

둘째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산 훈련장이요 훌륭한 실험실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성질인 자주와 자력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데 있어서 더없이 좋은 제도가 지방자치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실천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밟지 않고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도 민주정치의 발달사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그 이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개선해 옴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도 민주주의적인 제도는 민주주의적 의식구조와 행동방식을 갖춘 자만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을 과거의 그다지 짧지 않은 헌정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헌법을 창안해 놓았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태가 비민주적일 때는 그러한 제도란 한낱 걸치레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민주화를 위해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는 시민들이 자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값진 경험과 훈련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는 현지실정에 밝은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행정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즉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정이 이루어져 지방행정의 모든 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두어지고 그 수행과정도 주민에 의해 통제된다.

어떠한 정책이든 그것이 실시되는 지점과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지점간의 거리, 즉 행정거리가 멀수록 현장감이 줄어들게 되고 그

대신에 행정에 대한 조정과 통제의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어 거대한 중간관리 계층을 필요로 하는 관료조직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러한 거대한 관료조직은 주민의 관심인 지방행정의 결과보다는 행정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마련이어서 책임 행정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게 된다.

더욱이 지방정부가 수행할 사업의 선정은 물론 그 집행자에 대한 인사권과 재정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는한 지방재정의 궁극적인 수혜자인 지역주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주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뽑은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이 직접 뽑은 자치단체장이 집행함으로써 책임 행정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가 정착될 수 있게 한다.

넷째로 지방자치는 지방정치에 전에 볼 수 없었던 활력소를 집어 넣음으로써 정당민주화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선 지방자치에 필요한 각종 선거에서 입후보할 후보자 선발을 위해서 각 정당은 후보자들의 인선작업을 비롯하여 선거운동, 그리고 선거자금의 조달등 여러 측면에서 지방정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더구나 지방정치가 활발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중앙당과 지방 지부의 관계가 지금까지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정치가 활성화 될 수록 지방의 정치인들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중앙당과 지방 지부의 관계 또한 이전의 종속적 관계에서 상호의존적 관계로 변화될 것이다(조창현, 1995 : 16~21).

이처럼 지방자치에 따른 정치적 변화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독점해오던 정부권력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즉 지방분권화로 특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방의 이해관계 사항은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중앙정부는 전국적 관심사항에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구체적 타당성 및 분업화에 따른 행정효율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의 도입으로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 길³⁾이 확보되는 한편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지방정부는 유권자인 지역 주민에게 그들의 협력과 지지를 받으려 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의 향상이 기대된다. 요컨대 지방자치의 실시는 주민동원행정과 중앙집권적 관치행정이 각 지방의 실정과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지방분권적 민주행정 및 자율적 참여행정으로 발전해 나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자치의 재도입에 따르는 부작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지방자치는 자칫 지역 할거주의 사고를 조장함으로써 지방과 지방의 갈등, 지방과 중앙의 갈등, 궁극적으로는 국력의 분열의 시대로 진전될 가능성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조정기능을 약화시켜 행정의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조정 및 통일성 확보를,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의 궁극적 이념인 주민복지를 저해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이승중, 1991 : 12).

또한 지나친 참여로 인하여 국력의 낭비 또는 행정의 비효율성 및 책임성 저하 또는 지방행정의 정치화 현상에 따르는 정치적 불안의 우려도

3)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민참여는 반상회부터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지고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면 반상회, 공청회, 위원회, 민원 및 청원, 감시와 감독 및 독려, 집단행위(시위와 집단민원), 주민투표 등을 들 수 있다(김병준, 1994 : 452~458).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방의회 의원들 가운데는 지방의회 또는 의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질만한 행동을 하는 이가 적지 않으며 또한 지방주민들도 지방자치가 자신들의 삶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의원선거가 있으니 투표를 한다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전득주, 1992: 14).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방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공약으로 내세워도 당사자나 유권자들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도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실감나게 한다.

3) 국제화와 개방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국가들은 안보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냉전으로 말미암아 질서잡힌 국제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게 된 나라들은 미국이라는 군사경제적 강대국의 보호막 아래, 그리고 공산주의체제를 지닌 나라들은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 아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두 진영은 군사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대결적 자세를 보여왔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적 위치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정치제도, 정치문화, 정치과정을 표본으로 한 내용과 미국측 핵우산 속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국제적 이해가 정치교육의 핵심이 되어 왔다(이훈수, 1994: 76).

그러나 최근 몇년간 우리가 목격한 국제정치경제상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즉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의 개방과 이들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편입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정치상황을 특징지어 왔던 동서냉전체제를 와해시켰으며, 국제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미국의 국제경제적 지위가 약화됨에 따라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전제로 한 기존의 국제질서는 점차 퇴색하고 미국, 서구, 일본 3자간의 경제력 균형에 바탕을 둔 다극체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 후 단기간의 현상에 그치지 않고 21세기 국제질서의 기초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⁴⁾. 1990년 12월 파리회담에서 미소양국이 냉전이 종식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새로운 국제환경의 특징은 민족주의, 지역주의, 국제주의, 그리고 세계주의의 4가지로 특징된다.

새로운 국제환경의 첫번째 특징으로는 이데올로기 대립을 대신하는 민족, 인종대립의 표면화를 들 수 있는데 구 소련, 구 유고 그리고 예멘 등에서 일어난 소수민족 배격과 민족분쟁을 둘러싼 유혈내전이 그 예이다. 냉전시대에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 등 양국사이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에 묻혀 경시되었던 한 국가 안에서의 민족 혹은 인종적 대립이 양국체제의 종식으로 말미암아 표면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두번째 특징으로는 지역주의의 강화를 들 수 있다. EC, APEC, ASEAN, NAFTA 등 지역경제기구의 강화 또는 창출은 이제 세계경제가 각 나라들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던 경제관행을 벗어나 경제블럭의 형식을 띤 지역내 국가들의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구질서가 붕괴된 뒤에 나타날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해 나갈 힘의 근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들 수 있다. 군사적 일국패권주의 *Unipolar Hegemony*, 2국간 동맹관계의 회복 *Bipolarity*, 경제적 3국주의 *Three Economic Blocs*, 다국간 상호협력체제 *Multipolarity Multilevel Interdependence* 등이다.

국제사회는 또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되고 있는데 국제화란 ‘국제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공통의 준칙과 제도를 각 국가가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화는 그 동안 주권절대의 원칙하에 각 국가들이 고유한 규범과 제도를 지니고 국가간의 개별적 합의에 의해서만 서로 합의된 준칙과 제도들을 따르던 것을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국경을 넘는 인간활동의 범위 및 빈도가 증가하고 따라서 서로 다른 준칙과 제도의 충돌이 잦아지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의 규범과 제도를 각국의 국내활동까지 적용하게 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화는 곧 개방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란 ‘국가라는 인간사회의 기본단위의 존재를 배제하는 보다 적극적인 세계 단일 질서의 형성노력’을 말한다. 즉 국제화가 국가를 기본단위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임에 반해 세계화는 국경이 없는 단일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 처럼 국제화라는 용어는 현대세계에 있어 정치, 경제, 문화, 질서의 바깥 모습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구체적으로는 점증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국제화와 이에 따르는 계열화된 국제적 분업구조를 바탕으로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질서의 확산을 담고 서있는 의식형태로서의 국제화는 고도의 기술발달에 바탕을 둔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를 타고서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전파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간의 문화적 배타성이나 특수성은 상당히 깨어지고 취미, 기호, 풍습 등이 서로 닮아가는 현실을 낳고 있는 것이다(박상섭,

1995 : 40). 문제는 이러한 국제화·개방화의 경향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정치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분담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해 줄 것이며 또한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같은 요구를 도외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3세계, 동구권에 대한 경제협력의 증대, 해외평화유지군의 파병, 날로 강화되고 있는 시장개방의 압력 등이 이를 뒷바침 해준다. 이것은 이제는 국가정책이 국익만을 우선시하던 과거와는 달리 국익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도 적절한 배려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분을 앞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실리를 추구하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함으로써 국제공영에 이바지하는 한편 민족적 자긍심을 잃지 않고 국익을 보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 하겠으며 청소년에 대한 정치교육은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정치경제질서의 탈냉전화 다극화 현상을 배경으로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르는 정치교육 접근법 및 내용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통일문제

통일과 관련한 근래의 대외·대내적 상황의 변화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국제적으로는 동서화해 분위기의 진전, 동구공산체제의 몰락과 개방화 및 독일의 통일 및 국내적으로는 소련, 중국, 동구등 공산권 국가들과의 접촉의 증대, 남북한 경제교류의 활발화⁵⁾ 등은 우리가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기에 충분한 환

5) 남북교역은 1988년에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확대되어 1994년에는 승인기준으로 볼때 1억 9,87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경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50년 가까이 분단과 대립으로 이질화가 심화되어온 남북한 두 사회의 통일은 그로 인한 긍정적 요소와 함께 통일에 따르는 충격 및 이질화 사회의 극복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게 된다. 사실로서의 심각성은 최근 통일을 이룩한 독일이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곤경을 관찰하면 알 수 있다. 만일 통일로 인한 갈등이나 충격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통일은 우리민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저하시킬 우려마저 없지 않으며 심지어는 통일정책의 실패에 따른 민족의 재분열도 가능한 것이다. 생각하면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통일 자체에 있지 않고 민족복지의 증진에 있다고 하겠는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이와 같은 통일에 따르는 부작용 내지는 문제점을 도외시 할 수 없다(이승중, 1991: 14). 오늘날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수주의적인 통일론이나 이상주의적인 통일론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교육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정치교육의 방향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과 아울러 그와 같은 기본적 추세에 따라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내지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는바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전망에 대하여 적절히 부응하도록 수립될 것이 요청된다.

한국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치교육이 추구해야할 기본 방향으로서 자율적 결정능력

의 향상,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과 대화능력의 향상, 시장경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경제윤리의 함양,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국제의식의 형성,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통일교육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1) 자율적 결정능력의 향상

사회가 다양하게 분화되고 각 영역의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창조적, 비판적 사고력과 자율적 결정능력 등 고급사고력이 전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다양한 대안 중에서 자기의 상황과 필요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지식이나 기술등이 습득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자율적 결정능력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능력은 지식, 기술이나 가치관, 태도의 어느 한쪽만이 아닌 양자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배양될 수 있다(이승중, 1991: 18).

이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율적인 결정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능력' 또는 '정보의식'이 중요한 교육목표로 거론되고 있다(차경수, 1991: 5).

이러한 경향은 70년대 후반부터 현상학이나 비판이론이 개인의 선택과 삶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더욱 강해졌다. 민중교육이론 또는 급진교육이라고 불려워지고 있는 이러한 이론들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이 여러가지 현존하는 사회제도의 모순에 대한 지적과 합

게 결국은 개인의 선택과 자율적 의사결정의 존중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다.

2) 갈등의 평화적해결과 대화능력 향상

민주화 과정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유산과 관행의 철폐, 시민적 규범과 원칙의 확립, 시민참여의 확대 등으로 특징된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화 과정에서는 제 가치들이 분출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즉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 자유와 평등, 공익과 사익간의 갈등, 국제화로 인한 국익과 인류공영과의 갈등, 통일에 있어서 이질적 체제와 문화간의 갈등, 지역, 체제, 이념간의 갈등이 그것이다(이승종, 1991 : 17).

이처럼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계속되는 갈등과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대립된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는 미리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존중하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한번 결정이 되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쟁문화의 확립이 필요하다. 갈등을 단순히 조화의 장애물로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학의 제기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갈등과 모순에 직면하여 극히 단순하고 비 현실적인 해결책에 호소하기 보다는 그것들을 견뎌내는 능력 즉 '모호성에 대한 관용'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갈등과 자유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면 갈등해결 능력의 학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민주적인 논쟁문화에서 갈등은 은폐되거나 억눌리지 않고 그것을 결정하는 이해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이해관계를 공공적으로 표출시키고 관철시키는 일이 정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결정과정의 정당성도 인정하여야 한다(허영석, 1994).

이를 위해서는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조화적 인간관을 함양하는 교육이 제시되어야 한다.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인간이 지녀야 할 속성은 '중용의 덕'이다. 중용이란 과소와 과대의 양극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자유만을 구가하지도 않고 책임만을 강조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적절히 규제된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정치교육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시장경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경제윤리의 함양

한국 권위주의 정치가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가장 주력하였던 것이 경제발전 이었다. 세계에서 유래없는 경제발전은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에서는 이에 따른 빈부의 격차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여러 사회에서 부와 소득의 수준 차이는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가난한 나라에서조차 부유한 엘리트가 존재할 정도로 실제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소득과 부의 소유에 있어서 커다란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빈부의 갈등은 상대적 소외감으로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일부의 극단적인 청소년들이 사회주의 경제원리에 경사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오랫동안 이념적으로 대립해 왔으나 최근에 들어

소련의 몰락 이후로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우월성이 증명되고 있다.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빈부의 격차, 지나친 자유경쟁에서 오는 무질서, 과소비와 향락풍조등의 문제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면도 부정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체제가 인간의 행복과 역사의 발전에 기여해온 우수한 경제체제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만 자유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빈부의 격차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와 능력을 길러져야 한다. 산업의 발달과정에서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자본의 집중과 재벌의 독점, 축적된 부의 사회적 환원등 경제윤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경제윤리의 함양은 정치교육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4)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국제의식 형성

기존의 국제관계에 대한 교육은 냉전구도하에서 민주주의체제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국제평화를 추구하고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려 했던 국제정치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예를 들어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은 한국과 직접적인 전쟁을 하거나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로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서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저해하는 대상으로 가르쳐 왔다. 그러나 소련 및 동구권과의 관계개선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따른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

경제관계에 대해서도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국제무역의 이익에 대해서만 집중 설명하고 있을 뿐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이 겪을 수 있는 가격 불평등, 불리

한 교역의 조건, 대외 의존도의 심화 등 국제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관계에 대한 균형 있는 설명이 없어, 미래의 시민이 될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현실적 국제관계에 직면할 때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이춘수, 1994 : 85).

그러나 이러한 냉전적 사고방식에 기초한 국제관계에 대한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더구나 현재의 국제관계는 우루과이라운드 등에 의한 국제경제관계와 국제환경문제가 쟁점화 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국제관계가 군사외교문제를 넘어 경제문제, 환경문제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냉전적 사고방식에 따른 국제정치 위주의 국제관계 교육은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국제관계가 다양화되고 교류가 확대되어 갈수록 수반되는 문제가 민족문화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의 필요성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본질과 우수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하고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교양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상대주의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세련된 국제감각을 가지고서 세계평화와 국제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태도와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5)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통일교육

통일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당위이면서도 통일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통일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통일달성의 의지의 고양을 위해서 민족사에 대한 교육이나 통일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통합이론이라든가 세력균형이론과 같은 국제관계에 대한 지식의 교육이 필요하다(이승중, 1991: 27).

그러나 예멘이나 독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통일의 당위성이나 방법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이 거의 50년 가까이 서로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에서 생활하던 구성원들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여 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파생되는 갈등이나 충격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게 되면 실질적인 남북한의 통합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제도적으로는 통합이 되었을지라도 그 속에서 실생활을 영위하는 구성원들의 생활문화가 일정수준 이상의 통합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일 그 자체가 무의미해질 뿐더러 심지어는 통일체제의 존속 자체가 위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단체제하에서 길들여진 생활문화상의 이질적 양상이 통일의 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독일의 통일사례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통일된 독일의 대내적 현실은 이른바 통일후유증으로 지칭되는 극심한 혼란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체제적 지향에 대한 양 독일 주민의 컨센서스 결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생활문화의 이질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독일의 통일사례가 주지하듯이 20여년간에 걸

쳐 착실하게 다져진 교류협력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볼때 우리의 경우는 교류협력관계의 순조로운 진행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제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일에서 부터 통일체제의 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있는 제반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통일교육의 내용으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변화 전망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모색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변화는 대략 민주화, 지방화, 국제화와 개방화 그리고 통일의 진전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교육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내용이 될것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는 민주화 과정의 진전에 따라 민주 시민성의 함양이, 지방화의 진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성과 국민성의 조화와 균형이, 국제화와 개방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성과 자주적 국민성이 요구되며, 실질적인 통일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이나 방법론에 대한 교육 뿐만이 아니라 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 청소년의 정치교육은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인간성을 함양’하는데 목표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인간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주입식 교육으로는 이것을 달성할 수 없다. 더구나 현재의 교육방법은 대처

해야 할 사회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학생의 자율적 판단에 입각한 탐구활동은 외면한채 교사의 일방적인 주도하에서 구조화의 정도가 낮은 단편적 지식을 강의를 통하여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투입시키는 주입식 교육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주입식 교육방법도 지식 및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법으로도 전혀 효용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지적되듯이 태도나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가치관의 확립을 요구하는 장차의 정치상화의 변화를 고려할때 현행과 같은 주입식 위주의 교육방법은 최소한 정치교육을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적절치 못한 것이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라 하겠다.

이같은 논의에 입각하여 향후 정치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정치교육방법의 변화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와 같은 주입식 위주의 교육방법은 탐구형 학습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가치관의 갈등과 혼란으로 특징되는 앞으로의 정치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특히 조화적 가치관의 확립이 요구된다 하겠는바 이에 는 주입식 보다는 토론중심, 경험중심, 문제중심의 탐구형 학습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배양을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의 방법도 병행하여야 한다. 아무

리 탐구형 학습이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서 우월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정치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정치교육이 가치관 교육만을 필요로 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교육도 상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이승중, 1991 : 29). 조직화된 정치적 지식이나 규범등은 구두수업을 통하여 전달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통하여 직접·간접으로 경험한 사회적·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나 가치관 등에 관한 내용은 세미나나 토론이 훨씬 효과적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세미나나 토론을 통하여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들을 조정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세미나나 토론은 학생들에게 참여적 분위기의 조성은 물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셋째, 현대의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량으로 쏟아지는 정치적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컴퓨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상황이 변화될때 여러가지 대안과 그 대안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컴퓨터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치교육의 가장 큰 과제는 교육의 정치체제에의 종속성을 극복하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정치교육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983. 사회교육연구회 편, 『사회교육』, 서울 : 대한출판공사,
- 유형진·강환국, 1982. 『국민윤리교육개론』, 서울 : 형설출판사
- 전득주 외. 1992. 『현대민주시민교육론』, 서울 : 평민사
- 조창현. 1995. 『한국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서울 : 문원
- 김도경. 1995. “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방향”, 『동북아정세와 한반도안보』, 국제문제조사연구소
- 김영명. 1987. “한국의 정치변동과 유신체제”,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서울 : 법문사
- 박상섭. 1995. “국제화와 민족주의”, 『정책논단』, 한국외교안보연구원
- 우영호. 1994. “민주사회에 있어서 정치교육”, 『교육학연구』제12집, 계명대교육연구소
- 이승중, “한국사회의 정치변화와 정치교육”, 『사회와 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1.
- 이승중. 1994. “국제경쟁 시대의 한국 정치교육의 과제”, 『사회와 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이종열. 1989. “사회과 정치교육론”, 『사회과교육』 한국사회과교육협회,
- 이종열, 1992. “한국정치체제의 변동과 정치교육 내용의 변천”, 『호서문화연구』, 충북대호서문화연구소
- 이춘수. 1994. “국가경쟁력과 정치교육”, 『사회와 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차경수. 1991. “21세기 전망과 한국 사회과 교육의 지향과 과제”, 『사회와 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허영석. 1994. “독일통일에 비추어본 정치교육”, 『한국청소년연구』 제17호
- T.Tapper. 1979. Political Education and Stabilit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 Willem Langeveld. 1982. Political Education for Teenagers, 박용현 역, 『정치교육』,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Joshep S.Nye Jr. 1992. What is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Spring